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 촉구결의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4. 14

나. 제안자 : 홍인석 의원 외 13인

다. 회부일자 : 2001. 4. 1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 4.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인석 의원)

□ 제안이유

○ 일본은 최근 2002년도용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일부 교과서가 여전히 자국 중심적 군국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과거사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하여 역사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주요골자

- 일본 정부가 1982년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라는 원칙 및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와,
-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 채택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천명하고 있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부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축소, 왜곡이 시정되도록 일본 정부에 제검정을 통한 조치와 향후 역사왜곡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
- 중앙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축소, 왜곡 움직임에 대하여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부천시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가와사키 시의회가 본 결의안에 대한 지지와 과거사 축소, 왜곡의 시정을 위한 실질적 활동에 동참을 촉구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촉구결의문(안)

부천시의회는 일본이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줌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동반자적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축소, 왜곡 움직임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최근 2002년도용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감정을 통과한 일부 교과서가 여전히 자국 중심주의적 군국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과거사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하여 80만 부천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일본 정부가 1982년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전지에서 필요한 배려”라는 원칙 및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 채택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천명하고 있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감정을 통과한 일부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축소, 왜곡이 시정되도록 일본 정부에 재검정을 통한 조치와 향후 역사왜곡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중앙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축소, 왜곡 움직임에 대하여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여 일본의 역사왜곡이 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부천시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가와사키 시의회가 본 결의안에 대한 지지와 과거사 축소, 왜곡의 시정을 위한 실질적 동참을 촉구한다.

2001. 4. 24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 촉구결의안

의안번호	제473호
의결년월일	2001. 4. 24 (제86회)

발의년월일 : 2001. 4. 14

발 의 자 : 홍인석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 일본은 최근 2002년도용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일부 교과서가 여전히 자국 중심적 군국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과거사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하여 역사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주요골자

- 일본 정부가 1982년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라는 원칙 및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진후 50주년 특별담화”와,
-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 채택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천명하고 있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부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축소, 왜곡이 시정되도록 일본 정부에 재검정을 통한 조치와 향후 역사왜곡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
- 중앙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축소, 왜곡 움직임에 대하여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부천시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가와사키 사의회가 본 결의안에 대한 지지와 과거사 축소, 왜곡의 시정을 위한 실질적 활동에 동참을 촉구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 촉구결의문(안)

부천시의회는 일본이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줌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동반자적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축소, 왜곡 움직임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최근 2002년도용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일부 교과서가 여전히 자국 중심주의적 군국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과거사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하여 80만 부천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일본 정부가 1982년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

한 배려"라는 원칙 및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 채택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천명하고 있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부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축소, 왜곡이 시정되도록 일본 정부에 재검정을 통한 조치와 향후 역사왜곡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중앙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축소, 왜곡 움직임에 대하여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여 일본의 역사왜곡이 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부천시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가와사키 시의회가 본 결의안에 대한 지지와 과거사 축소, 왜곡의 시정을 위한 실질적 동참을 촉구한다.

2001. 4. .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